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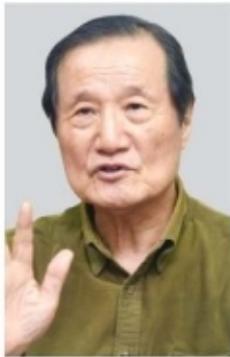
# "위기인데 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경제 원로들 '경고'

입력 2022.10.03. 오후 6:11 · 수정 2022.10.04. 오전 12:39

증폭되는 복합위기에 경제 원로들 고언

"단기패닉 아닌 스태그플레이션...경제체질 바꿔야"

"지금은 뉴노멀 시기...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선 안돼"



윤증현 前 기재부 장관

노조는 임금인상 자체  
기업은 고용안정 시키고  
국민도 고통분담해야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정치싸움에 골든타임 놓쳐  
韓, 장기 低성장 구도 진입  
對中수출 구조적 전환점



김중수 前 한국은행 총재

정부, 환율·물가 대응하며  
스스로 과대평가 말아야  
국민에 신뢰 줄 소통 중요



전광우 前 금융위원장

단기 대책 배몰되지 말고  
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중장기 체질개선 나서야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통화스와프, 정답은 아냐  
과거와 다른 뉴노멀시대  
과거 해법 매달려선 안돼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맞은 위기인데 정부와 정치권 등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위기 요인입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상황인데, 정부와 여야 모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극복을 주도한 경제 원로들이 3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라며 고언을 쏟아냈다.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다.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이끈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

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치권과 민간 기업, 시민 모두가 위기라는 의식이 있어 빠르게 극복했다”며 “지금은 아무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때 금융당국 수장이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위기가 단기 패닉이라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 대책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은 정부와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라며 “돈 풀기식 인기 영합주의는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지금은 과거와 다른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시기”라며 “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했다.

박승 전 총재는 “한국이 또다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구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 엔진으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종수 전 한은 총재는 “외부 충격이 지나간 뒤 복원력이 중요하다”며 “경제팀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 **“대내외 균형 무너진 복합위기... 경제팀, 환율·무역수지부터 챙겨라” “위기 극복할 리더십 안보인다” 쓴소리**

---

과거 위기에 맞섰던 경제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분명 다르지만 어떤 면에선 지금이 그때보다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 한국 경제를 좌우할 대외 여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해법을 듣기 위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종수 전 한은 총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5명의 경제원로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 **“중국의 역할이 변했다”**

---

박승 전 총재는 “한국은 대중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교역의 문을 열고 산

업화에 나선 덕분에 한국이 철강·조선 등 중화학공업에서 지난 30년간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른 데다 기술력이 더 이상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중국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요를 이끌어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저성장·고금리·고환율 국면을 맞았다”며 “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른 성장 위기와 고금리 체제로 인한 경제 위축의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외채 구조와 외환보유액 같은 것들은 지금이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낫다”면서도 “중국 경기가 악화됐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국가 재정과 부채 여건이 더 나빠진 점은 과거보다 불리한 요인”이라고 했다. 또 “2008년 위기 땀 국제 공조가 잘 이뤄졌지만 지금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공조가 잘 안돼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옛날에 하던 단기대책만 생각하거나 고집하면 안 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과거 위기는 단기 패닉이었지만 지금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절하율이 더 크고 그래서 무역적자가 이어지는데, 이는 노동개혁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장의 메시지”라고 했다.

---

## “경제 체질 개선 필요”

---

환율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종구 전 위원장은 “통화스와프를 하면 환율 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테지만 결코 강달러 기조에 의한 환율 상승세가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에 관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중수 전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상황은) 내재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워낙 크게 왔다”며 “문제는 외부적인 (위기) 요인을 거친 다음에 복원력을 얼마나 갖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

## “국민 모두 고통 분담해야”

---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과 성장, 물가, 금리 등 대내 균형이 모두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실물 부문은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지금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톱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사이에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우리처럼 자원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내외 균형이 무너질 때는 대외 균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를 비롯한 환율 정책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하고 기업은 그에 걸맞은 고용 안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전량 수입하는 기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mailto:justjin@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mailto:van7691@hankyung.com),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mailto:j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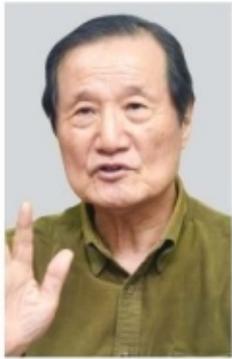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경제

# "대내외 균형 무너진 복합위기...경제팀, 환율·무역수지부터 챙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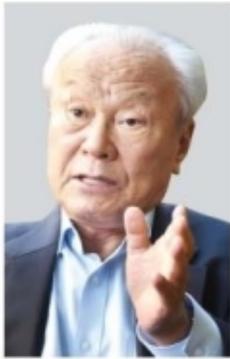
입력 2022.10.03. 오후 6:12 · 수정 2022.10.04. 오전 12:39

## | "위기 극복할 리더십 안보인다" 쓴소리



윤증현 前 기재부장관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기업은 고용안정 시키고  
국민도 고통분담해야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정치싸움에 골든타임 놓쳐  
韓, 장기 低성장 구도 진입  
對中수출 구조적 전환점



김중수 前 한국은행 총재

정부, 환율·물가 대응하며  
스스로 과대평가 말아야  
국민에 신뢰 줄 소통 중요



전광우 前 금융위원장

단기 대책 배몰되지 말고  
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중장기 체질개선 나서야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통화스와프, 정답은 아냐  
과거와 다른 뉴노멀시대  
과거 해법 메달려선 안돼

과거 위기에 맞섰던 경제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분명 다르지만 어떤 면에선 지금이 그때보다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 한국 경제를 좌우할 대외 여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해법을 듣기 위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5명의 경제원로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중국의 역할이 변했다”

박승 전 총재는 “한국은 대중 수출 중심의 성장 엔진을 바꿔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교역의 문을 열고 산업화에 나선 덕분에 한국이 철강·조선 등 중화학공업에서 지난 30년간 막대한 무

역흑자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오른 데다 기술력이 더 이상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중국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요를 이끌어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전환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저성장·고금리·고환율 국면을 맞았다”며 “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른 성장 위기와 고금리 체제로 인한 경제 위축의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외채 구조와 외환보유액 같은 것들은 지금이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낫다”면서도 “중국 경기가 악화됐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국가 재정과 부채 여건이 더 나빠진 점은 과거보다 불리한 요인”이라고 했다. 또 “2008년 위기 땀 국제 공조가 잘 이뤄졌지만 지금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공조가 잘 안돼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옛날에 하던 단기대책만 생각하거나 고집하면 안 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과거 위기는 단기 패닉이었지만 지금은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절하율이 더 크고 그래서 무역적자가 이어지는데, 이는 노동개혁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장의 메시지”라고 했다.

---

## “경제 체질 개선 필요”

---

환율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종구 전 위원장은 “통화스와프를 하면 환율 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테지만 결코 강달러 기조에 의한 환율 상승세가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에 괜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중수 전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상황은) 내재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워낙 크게 왔다”며 “문제는 외부적인 (위기) 요인을 거친 다음에 복원력을 얼마나 갖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

## “국민 모두 고통 분담해야”

---

윤증현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등 대외 균형과 성장, 물가, 금리 등 대내 균형이 모두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실물 부문은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지금은 한마디로 퍼펙트 스톱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사이에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우리처럼 자원 없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내외 균형이 무너질 때는 대외 균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를 비롯한 환율 정책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하고 기업은 그에 걸맞은 고용 안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전량 수입하는 기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mailto:justjin@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mailto:van7691@hankyung.com),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mailto:j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경제

# 추경호 "한국,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입력 2022.10.03. 오후 5:02 · 수정 2022.10.03. 오후 5:46

지금 상황 과거 위기와 비교해보니  
대외건전성 '탄탄'하지만 중국 저성장 등 악재 더 많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에서 거버너 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금과 1997년, 2008년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

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보유고도 많기 때문에 (IMF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외환 상황에 대해 굉장히 건전하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외환 시장 불안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저성장으로 올 수 있는 영향에 더 유의하는게 맞다”는 게 추 부총리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상황 진단을 두고 시장의 상황은 엇갈린다. 정부가 최근 환율 방어에 나섰음에도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 4364억달러에 달한다. IMF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말 204억 달러에 비해선 20배가 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2007년 말 2622억에 비해서도 2000억 달러 가량 여유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대를 뚫었지만,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원화 가치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과 과거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의 생각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이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지며 회복을 도왔던 과거 위기와 달리 올해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년 사이 10%대에서 50%로 뚝 국가부채비율은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과연 정부가 예전처럼 돈을 과감히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중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G20과 같은 국제 공조 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2022년 위기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내·외부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본다.

---

### ○외환보유액 204억→4631억달러로 증가

---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비롯한 대외 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튼튼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204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둔 2007년 말엔 2622억달러로 늘었고, 작년 말엔 4631억달러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로 따져봐도 각 시점마다 3.7%, 22.4%, 25.8%로 꾸준히 개선됐다.

대외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던 과거 위기와 달리 현재 한국의 대외순자산 규모는 6

월말 기준 7441억달러에 달한다. 1997년말 한국은 대외순자산 645억달러 적자, 2007년말에는 1889억달러 적자 상태였다. 대외 부채가 더 많았던 과거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많은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진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해외 경제 당국과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추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옐런 장관은 한국의 대외건전성 수준에 대해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과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외환위기 직전 A+등급이었던 한국의 국제신용등급(S&P기준)은 위기가 본격화하자 1997년 12월 B+까지 급전직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엔 위기 발발에도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A등급을 유지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2016년 이후 과거보다 높은 A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같은 기준으로 각각 A+등급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등 소위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통해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억제했다. 2015년에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해 민간 은행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게 했다. 외화 LCR은 위기 상황에서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외화 순현금 유출액대비 현금화가 용이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규제 비율은 80%인데, 8월 기준으로 외화 LCR은 124.1%에 달했다.

과거 두차례 위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적인 ‘강(強)달러’현상으로 실질적인 원화 가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도 정부가 위기 재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100.21로 기준점인 2010년(100)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과거엔 명목 환율 상승과 함께 실질실효환율이 1998년 1월 72.32, 2009년 2월엔 83.58까지 떨어졌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상대국과의 물가 변동과 교역량이 반영된 환율로, 명목 환율에 비해 자국 통화의 대외구매력과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지만 원화의 구매력 하락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란 게 정부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두 차례 경제 위기로 한국은 환율 급등은 곧 외환위기, 경제위기로 보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대외건전성 관련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

## ○어려워진 경상수지 V자 반등

---

전문가들은 당장의 환율 변동보다는 중국의 저성장과 탈세계화에 따라 분리된 공급망, 과도한 국가부채 등 위기 극복의 장애물이 될 경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출신으로 2008년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금 상황은 과거에 비해 좋은 점도 있지만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더 어렵고 도전적”이라며 “중국의 고성장이 끝나가고 있고 재정이나 부채도 2008년보다 나빠져 경기 살릴 실탄 여력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G20과 같은 국제 공조를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했지만 지금은 각자도생 시대가 됐다”며 “뉴노멀(새로운 기준·New Normal)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거 위기 때와 같은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과 2008년 한국은 그해 상당한 폭의 경상수지 악화를 겪고 바로 이듬해 대규모 흑자로의 전환에 성공하며 환율 안정을 되찾았다. 1997년 경상수지가 10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한국 경제는 이듬해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를 타고 무역수지가 3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1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에도 17억달러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쪼그라들었던 것이 2009년 330억달러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09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404억달러에 달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통계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연동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88억 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1996년(206억달러)보다도 많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보니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보단 수입 비용 증가가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480억달러로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을 수입하는데만 179억6000만달러가 들었다. 작년 동월 대비 81.2% 늘어난 수치다.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배터리 등을 만들기 위한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입도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과거와 같은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1997년 39억1000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08년엔 240억 2000만달러로, 2021년에는 758억7000만달러로 늘었다. 한국 기업의 생산·판매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었지만, 회복력도 제약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도 “과거엔 한국에서만 생산해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부품 등 중간재를 해외에서 가져와서 수출하는 게 많다”며 “우리 경제구조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된 국가재정도 한국의 위기 회복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1997년 11.1%, 2008년 26.8% 수준이었던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49.8%로 높아졌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464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가계신용 규모는 현재 1862조원 수준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전 이사장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때 실탄 여력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금리 인상의 부담도 과거보다 훨씬 안 좋다”고 지적했다.

---

### ○“중국 저성장·국제공조 붕괴 등 리스크 더 커”

---

세계 경제 환경은 한국에 더 큰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저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1999년에도 7%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2003~2007년엔 10%를 넘겼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9~10%를 기록하며 경제 위기의 ‘무풍지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6% 대로 떨어진 중국의 성장률은 올 상반기 2.5%로 급락했다.

1991년 냉전 붕괴 이후 세계화 추세를 타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높은 성장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가 마치 과거의 냉전과 유사하게 세계 경제가 자유민주진영과 사회주의진영으로 분리되면서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에 달했다. 2019년 한국은행 분석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은 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중

간재, 중국의 제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단위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커다란 리스크(위험) 요인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오일쇼크)가 터지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민주진영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이 만들어졌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보다 폭넓은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1999년 9월 IMF연차총회에서 지금의 G20 창설이 이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장관급 회의에 머물렀던 G20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공조로 조율된 재정·통화 정책, 신흥개도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무역·투자 분야 신규장벽 동결 합의를 통한 보호주의로의 회귀 방지 등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마찰과 전쟁 등 여파로 과거와 같은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 이로 인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이 있따르는 ‘역환율전쟁’이 사실상 전개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국제 공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최근 한국을 찾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상하면 서로 생산품 가격이 높아지며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경기는 둔화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각국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조율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공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57196>

---